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2-11 / 2002년 11월 26일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경제적 의미와 평가

리렌중(李連仲)

中共中央 政策研究室 局長

I. 발표요지

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 최근 개최된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20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GDP를 4배 늘려 일인당 GDP가 3,000달러에 달하도록 할 것임.
- 금번 16대에서 언급한 全面的인 小康社會와 鄧小平이 제기한 小康社會는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름. 덩소평이 1980년 제기한 소강사회가 물질적인 생활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전면적인 소강사회는 물질문명, 정신문명, 문화수준 제고 등 3가지 측면의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함.

- 중국은 현재 물질적으로는 소강사회에 진입했지만, 아직 질적인 수준이 낮고 발전이 불균형 함.
- o 생산력과 과학기술, 교육수준이 낙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o 도시와 농촌의 이원(二元)경제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지역차이의 확대 추세가 지속됨.
- o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업과 사회보장 압력이 증가함.
- o 생태환경, 자연자원과 경제사회 발전의 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음.
- o 경제과학기술 등 측면에서 선진국가보다 뒤떨어짐.
- o 경제체제와 기타 관리체제가 아직 완비되지 못함.

□ 16대에서 제기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 GDP를 2000년의 4배로 늘려 종합국력과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강화시킴
- o 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신축성 있는 개방경제 시스템을 구축함. 도시화를 통해 도농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제도와 취업문제를 해결함.
- 법과 제도 개혁을 강화하여 의법치국(依法治國)의 기본방침을 달성하여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함.
- 전 민족의 사상도덕 수준과 과학문화수준, 보건 수준을 제고하여 현대국민교육체계, 과학기술과 문화창조체계, 건강의료체계를 구축함.

-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회발전을 촉진함.

나. 세부적인 정책과제

□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부단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임.

- 경제건설과 개혁의 주요임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시키고, 경제구조조정과 공업화, 정보화, 현대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 건강발전을 실현하는 것임.

□ 신흥공업화를 통해 과교흥국(科教興國) 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함.

- 공업화는 여전히 현대화과정에서의 어려운 역사적 임무이고, 정보화는 공업화와 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임.
- o 선진국은 농업문명→산업문명→공업문명→정보문명의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쳤지만, 중국은 공업화와 정보화를 결합하여 동시에 발전시켜야 함.
- o 인도에서는 정보화로 공업화를 견인하여 국민경제의 도약을 실현하였음.

□ 농촌경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화과정을 가속화 함.

- 농촌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현대화된 농업 건설, 농촌경제 발전, 농민소득 증가를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의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함.
- 농촌 잉여노동력을 비농업과 도시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공업화와 현대화 실현의 필연적인 조건임.

- 장기적으로 가정도급제 경영을 기초로 하는 경영모델을 완비함. 일정 조건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을 서로 양도할 수 있음.
- o 농촌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세제 개혁을 통해 농민 부담을 경감시킴.
- 현재 농촌경제는 위축되고 있는바, 농민소득증가율이 1996년에는 9%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1997년 4.8%, 1998년 4.3%, 1999년 3.6%, 2000년 2.1%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비록 지난해에는 4.1%로 약간 회복되었지만 과거의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o 이같은 농촌경제 침체는 △농산물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민소득 감소,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윤 감소, △농촌 소득의 1/4를 차지하는 향진기업의 경영 부진 등에 기인함.

□ 서부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함.

- 중앙정부는 투자프로젝트와 세수정책 그리고 재정이전지불 등의 측면에서 서부지역을 지원할 것임.
- 중부지역은 구조합리화를 강화하고 농업산업화, 전통산업 개조를 추진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여 공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해야 함.
- 동부지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현대적 농업을 발전시키며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킴.

□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소유제개혁을 완성함. 생산력 발전과 생산력 해방의 요구에 기초하여 공유제를 주체로 하면서 다양한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경제제도를 견지해야 함.

- 공유제 경제의 주도적 지위를 확실히 인식해야 함. 국유경제를 발전시켜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중국의 경제실력, 국방실력과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또한 집체경제는 공유제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임.

-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견지하고 유도해야 함. 개인경제, 사영경제 등 다양한 형식의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사회 각 계층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생산력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함. 사회주의현대화건설과정 중 이 두 가지 경제형태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임.
 - 국민경제구조의 지속 조정과 국유자산 관리체제의 개혁은 경제체제개혁의 중대한 임무임.
 - 국가소유 전제 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함.
 - 국가는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국가를 대표한 투자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유자의 권익, 권리, 의무와 책임을 통일시켜 자산관리, 인력관리, 사무관리를 결합시키는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건립해야 함.
 -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대형국유기업, 인프라시설 및 중요한 자연자원 등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기타 국유자산은 지방정부가 담당함.
- 정부의 거시조정과 시장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심사 절차를 규범화하고 감소시켜야 함.
- 경제성장, 취업증가,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을 거시경제조정的主要 목표로 삼아야 함.
 - 내수확대는 중국경제 발전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출발점임. 내수확대방침을 견지하여 정세에 따라 적당한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해야 함.
 - 투자와 소비관계를 조정하여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함.

- 국가계획과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어울리는 거시경제 조정체계를 건립해야 함. 예산, 결의와 관리제도를 완비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감독과 세수제도를 강화해야 함.

□ 분배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함.

- 국가와 기업, 개인의 분배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노동, 자본, 기술과 관리 등 생산요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주체로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해야 함.
-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은 사회안정과 국가안정을 담보하는 것임.
- o 기본 양로보험제도와 기본 의료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킴.

□ “외국기업 유치(引進來)”와 “해외시장 개척(走出去)”를 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함.

- 경제글로벌화와 WTO 가입의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더욱 넓은 범위,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제경제기술협력과 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발전공간을 넓히며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고 외자이용 수준을 제고함. 외자이용과 국내경제구조조정, 국유기업 재편과 개조를 연계시켜 농업, 제조업,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장려함.

□ 취업기회를 무단히 확대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함.

-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취업환경 개선과 취업기회 창출을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야 함. 적극적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고 취업기회와 정리해고자 재취업기회를 창출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함.
- 경제발전의 최종목적은 전국민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있는바, 지속적인 주민소득 증대, 소비영역 확대, 소비구조 고도화를 통해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함.

II. 토론요지

問: - 2020년에 일인당 GDP를 3,000달러로 제고할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심각한 농촌문제와 은행부실채권 문제 그리고 대량의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재정 적자 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가?

답: - 1980년에 등소평은 2000년까지 일인당 GDP를 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기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음. 그러나 중국은 이미 1999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음.

- o 2002년 현재 산업구조 합리화, 기업경영 메커니즘 혁신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시장메커니즘이 완비되어 가고 있으며 재정정책, 통화정책, 분배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조정을 통해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목표를 실현할 자신이 있음.
- o 금융체제 측면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하며 소비대출을 발전시키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임.
- o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증가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며 거시조정으로 내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임.

問: - 서부대개발 문제에 있어서 국무원에 “서부대개발판공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가 동부에 집중

되고 있는 추세가 여전해서 동서부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 서부대개발 사업은 외국에 대한 의존보다는 주로 중국이 보유한 자체 능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임.

- o 서부대개발에 유리한 여건은 이미 갖추고 있는바, 생산과잉으로 인해 대량 축적된 물질자본, 9억여 元의 은행예금잔고, 개혁개방 과정에서 양성된 기업가 등 인적 자원, 동부지역의 지원, 서부지역 자체의 자력갱생 능력과 풍부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은 모두 유리한 조건임.
- o 현재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우대 조치를 출시하고 있으며, 서부의 발전 잠재력이 크므로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외국기업 입장에서조차 바람직한 일임.

問: - 이번에 黨章 개정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성격을 과거 “노동계급의 선봉대”에서 “노동계급의 선봉대이자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재규정 하고, 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소위 “3개대표론”을 공식 명기하였음. 이번의 黨章 개정 의미를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변화 내지는 조정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또한 당이 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치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음.

답: - 중국의 정치제도는 변하지 않음. 당장 개정의 의의는 중국의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전체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건설에 투입하도록 해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있음.

- o 사회주의는 共同富裕를 목표로 함.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로 민영기업가, 회계사 등 새로운 계층이 생겼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 당원의 요구에 부합한 사람에게는 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